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코앞… 100여건 쟁점에 협상 난항

與野, ‘2+2’ 회동에도 간극 못 좁혀
법인세,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등
원내대표 간 추가 회동서 논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이견도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점점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거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비상계엄 1년 사과’ 두고 내홍 극심

양향자 “계엄은 불법… 반성해야”
오세훈 “중도층 얻으려면 사과해야

내부 결집 입장도… 사과 실익 없어
장동혁 “결과적으로 혼란·고통 드러”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집권 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 장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반복적 사과는 이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 CGV대구 한일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높이는 최고위원까지 등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되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같은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

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고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 20여명과 함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뒤흔 ‘선수’들은 더 다급한 모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에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

리”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과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은 내부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며 사과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등 사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다. 왜 계속 쪼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사과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

조승래, 국민의힘 향해 “헌법·정치적 해산 겪을 것”

〈민주당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과 커녕 내란 옹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강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



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과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

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

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